

시론

일본이 진실로 친선을 원한다면 과거부터 사과하라



오 주 섭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친일 청산 못한 결과, 독립기념관장에 뉴라이트 임명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나 집단, 국가가 반성하고, 잘못을 사과하지 않는데 그들을 감싸면, 심지어 추종을 한다면 이것을 정당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일제 강점기 35년의 역사를 바로잡지 못한 결과 광복 79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대한민국은 친일, 일본 앞잡이, 밀정들이 판을 치고 있다. 일본의 역사 왜곡에 반대하며 건립한 독립기념관장에 역사 왜곡에 앞장서고 있는 뉴라이트 출신을 임명한 것이 끝은 아닐 것이다. 친일매국노들을 청산하지 못한 결과가 참혹한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일 관계 출발점, 일본의 진정한 사과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3년 10월3일 기고문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일본이 진실로 양국의 우호 친선을 위한 경우 먼저 자기가 우리 민족에게 범한 그 포악무도(暴虐無道)한 과거를 사과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억지로라도 이를 일본에 요구할 것은 결코 우리의 자존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만이 과거의 숙원(宿願)을 청산하는 길이며, 따라서 우호와 친선의 양국 관계를 이루는데 절대 불가결의 출발점을 이루기 때문인 것이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일본은 먼저 자기 과거를 우리 앞에 청산하는 성의를 가져야 한다. 일본이 이와 같은 성의를 표할

진대 우리도 구태여 지난날의 감정만을 고집할 협량(狹量)의 민족은 아닌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1965년 6월, 박정희 정권이 한 일 수교를 하기 오래전부터 한·일 관계 개선의 첫 번째 조건으로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과오를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복 이후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이래 일본은 우리 민족에게 그들이 저지른 포악무도한 과거를 진실로 사과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 후 유대인 학살 등 나치 독일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 반성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1970년 서독의 빌리 브란트 총리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나치에 희생당한 이들을 기리는 기념비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모습으로 전 세계에 깊은 인상을 남기기도 했다.

일본의 경제부흥은 한국전쟁 특수 덕

김 전 대통령은 또 기고문에서 일본이 패망한 후 전후 복구 과정에서 우리 민족의 최대 비극인 한국전쟁을 어떻게 이용했는지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민족 원한의 625 동란이 일본을 위하여는 천래(天來)의 행운이 되었으니 운명의 장난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일본은 한국전쟁 중 소위 비락(非樂) 경기의 덕택으로 패전이 누구의 일이었다냐? 할 정도로 살찌고 기름졌으며, 또 상상도 못할 정도의 관대한 구화조약(媾和條約,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일결은 듯 함을 체감할 수 있었던 것이다. 동시에 한국 정부와 민간인으로 이루어진 수입 일방(一方)의 무역역도 결코 경시할 수 없는 거액이었다는 것은 일본 자신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미국 곤룡(袞龍)의 소매자락에 숨어서 거만한 무역 태도와 무책임한 조약품(粗惡品)을 수출

하는가 하면, 한국 경제는 일본이 아니면 존립할 수 없는 것 같이 방언(放言)하여 왔으며, 심지어는 세계 각국에 수출하는 선박을 유독 우리나라에만 이를 거부하는 해괴한 행동을 취하여 왔던 것이다. 일본이 진실로 현명하다면 차제에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 노력하는 동시에 한국 부흥에 성의와 관심을 경주하여 이웃 나라의 재건에 진실로 협조하는 태도로 임함으로써 이와 같은 문제는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한·일 관계 개선 앞세워 친선만 강조, 극히 위험한 견해

김 전 대통령은 기고문에서 한일 양국 간의 관계 개선에만 몰두해 양국 친선만을 강조한 인사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침을 가하고 있다. "특히 일언(一言)코자 함은, 한국의 일부 인사 중에는 현 정세 하 한일 관계 개선이 요청되는 면에만 관심한 나머지 덮어놓고 양국 친선만을 운위(云謂)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극히 위험한 견해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남에게 교만을 부릴 하등의 필요도 심사(心思)도 없으나 한편 남으로부터 받아야 할 당연한 예절을 포기함으로써 민족의 위신을 추락시키고, 스스로를 욕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더욱이 그것이 한·일 간의 금후(今後) 천년 국교의 기본적 출발점이 되어서라."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뉴라이트 등 역사를 왜곡하려는 자들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꾀변(詭辯)으로 흑세(黑世)민(感世譴民)하려 들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했음에도 사과하지 않는데 이를 두둔하거나 교묘하게 진실을 왜곡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문화난장



양 수 경

총장축제부위원장

시민이 구상하고 만든 축제가 최고

로 열린 '제21회 광주 추억의 총장축제' 실행 계획 보고회에 참석했다. 오는 10월2-6일까지 5일간, 총장으로 일원에서 펼쳐질 추억의 총장축제 운곽을 알 수 있었다. 내용 하나하나가 기다려지는 축제였다. 올해가 스무번째라고도 다시 첫 번째를 맞이한다. 그동안 지속되었던 추억의 시점이 이번엔 대폭 확장된 게 특징이었다. 과거-현재-미래로의 선순환적 시점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추억을 불, 열정, 시민참여, 대동의 정신이란 컨셉으로 엮어 무려 44개의 프로그램에 펼쳐놓는다. 또 '1 day - 1big event'로 날마다 중요 포인트를 쏙 빼 놓았다. 어느 날 축제에 가면 어떤 재미면서도 의미있는 이벤트가 있다는 거, 정말 반갑다. 우리들에게 '새로운 추억'이 리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감이 충만했다.

무엇보다도 '시민참여' 컨셉이 다가든다. 일반적으로 만들어 내려주며 '즐거워요'가 아니라 '우리 함께 만들어봐요'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 언론 용어로 퍼블릭 액세스(public access)란 게 있다. 시청자들이 미디어 산물을 수동에서 탈피해 능동적인 참여로 변화시키는 매스컴 운동이다. 이 원리는 학교나 축제에서도 동일하다. 교사가 일방적으로 학생들에게 설명을 하거나 축제 조직위원회에서 방문객들에게 보여주는 것에 급급한 행사를 기획한다면 기대할 게 없어진다.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 관객들은 복잡한 교통이나 축제가 남긴 지저분한 거리가 연상되는 부정적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 과비용의 투자에 비해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어떤 것이 내 안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퍼블릭 액세스처럼 나도 그 공간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움직일 필요가 있다.

청년기획단 '찐이2기'가 만드는 청년브랜드, 조선타 K컬처 공헌 기획학과의 '총예기획단'이 만드는 체험프로그램, 지역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만드는 5개의 시민기획프로그램 등이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눈길을 끈다. 주최축이 던져주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구상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신선하다. 지역민과 동네주민들이 축제를 기획하고 연출하는데 기꺼이 참여하는 것은 적지 않은 즐거움이다. 그 축제 제작과정에서 자신들의 장점을 발견하게 되고 삶의 기쁨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긍지를 갖게 된다. 그보다 더 좋은 일도 없다. 진정한 시민참여가 행해지는 총장축제는 그래서 대한민국 명예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된 거 같다.

교직에 몸담아 오면서 '나에게 배우고 있는 이 아이들이 지금은 내 학생이지만 어느 순간에 내 동료가 되고 장차是我的 스승이 돼 세상의 주역이 될 것'이란 생각을 했다. 그래서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된다고 스스로 되뇌이며 살아왔다. 아이들이 공부에만 매달리지 않고 가끔은 곳곳의 축제를 찾아가며 건강한 삶의 즐거움을 만끽하며 살아가길 바란다. 그리고 때로는 직접 참여해 만들어가는 즐거움도 가졌으면 한다. 가을이 시작하는 총장축제에 우연이라도 제자나 친구를 마주치길 희망해 본다.

독자투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일상의 주변이나 방송 등을 통해서 집회 시위 현장을 보게 된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에서는 '집회의 자유'와 '적법한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아울러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모두에게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경찰에서도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집회시위 보장을 하고 있다.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 함께 만들어야

집회시위는 관리·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또한 주민불편과 교통 혼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토록 해 시민행위로 확보와 질서유지, 안내요원 등을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경찰에서는 최근 판례나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 등을 반영해 인권 침해적 요소를 없애고 있다.

이에 집회시위 참가자들 또한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소음, 차량 막힘, 폭력적 행동은 스스로가 자제하고 국민의 일원으로서 집회하는 사람과 집회를 하지 않는 사람과의 상호 같은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 사회가 선진사회로 나아가는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이주호·장흥경찰서 경비반보좌)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모종도 못 구하는 배추 농사 하늘만 원망해야 하나

걸어지는 폭염과 기습 폭우에 배추가 말라죽고 모종 공급까지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이다. 고공행진 중인 배추값에 농민은 마참가지고 소비자 자들도 한숨이 절로 나온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가을 생산량이 최소 10%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가 중국산을 수입해 풀다지만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남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보상에 나선 곳이 20~30%에 이른다. 여기에 현재 시장에 출하되는 여름 고령지 배추도 급증하면서 상승 기대감으로 추가 정식하는 농가가 늘었다. 육묘장의 물량이 부족해진 것이다. 특히 모종마저 발아·생육 장애로 불량이나 다수 발생하고 밭에 심은 것까지 고사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평년에 5-6천원 선이던 모종 한 판(128-196개)이 2-3만원대로 올랐다. 그러나 이도 구하기 어렵다. 사실상 품질이다.

최근엔 집중호우로 도내에선 641.7ha 규모가 피해를 입었다. 또한 작목전환 지원 사업을 통해 올해 재배 면적이 400ha 줄어들었다. 지난해 가을-겨울배추 생산이 4천135ha였던 최대 주산지

인 해남도 22.8%가 감소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가 올해 전국 가을배추 재배의 향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1만2천870ha로 전년과 평년 대비 각각 2.1%, 4.3% 줄었다.

얕은 데 덮친 격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김(金)배추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장 시즌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김장에 쓰이는 가을배추가 모자라 대안으로 이어질까 걱정스럽다. 벌써부터 포장김치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늘어 대형마트와 온라인에서 품귀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 재배 면적이 준데다 기후 위기가 겹쳐 가격이 치솟았다. 파릇파릇해야 할 드넓은 밭이 황폐해 변했다. 하늘만 원망해야 하는지 농민들은 손을 놓고 있다. 농사가 더 힘들어지고 있다. 저렴한 중국산이 들어와 국내 농가에 타격을 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밭을 갈아엎어야 할 수 있다.

가을-겨울배추 수확이 맞물려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수급 균형이 이뤄질 가능성은 남아있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한 가닥 희망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등록외국인 비율 전국 5위 전남 이민정책 전환 필요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하나의 해결책이 될 것 이란 믿음에서 전남도는 이민정책에 공을 들여왔다. 하지만 등록외국인은 근로자가 많고 계절 근로, 비전문취업 등 단순 기능인력이 집중돼 있는 편이다. 이민·외국인정책을 국가가 주도하면서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 준비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지역 산업에 도움이 되고 인구 문제를 위해 더욱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다.

전남연구원이 올해 7월 발표한 법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내 거주 등록외국인은 약 5만 4천명으로 전남 인구의 약 3.0%를 차지했다. 전국적으로 142만명(전체의 2.8%)에 달한다. 비율로 보면 전남은 17개 시도 가운데 5위로 3년 만에 6계단 수직 상승했다. 그런데 체류 자격 유형 별론 취업 56.8%, 정주 28.9%, 유학 10.4% 등으로 대부분의 시군에서 일자리 목적이 두드러졌다. 청년인구 유출, 고령화 등으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전남은 지방소멸 위기가 가장 큰 지역이다. 전남도는 법무부 토론회, 국회 세미나 등을 통해 컨트롤타워인 이민청 신설을 적극 지지했

으며 광역비자 도입 등 지역 산업 수요에 기반하고 지역이 주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국' 단위 전남 조직을 운영하고 정착 지원금도 지급하는 등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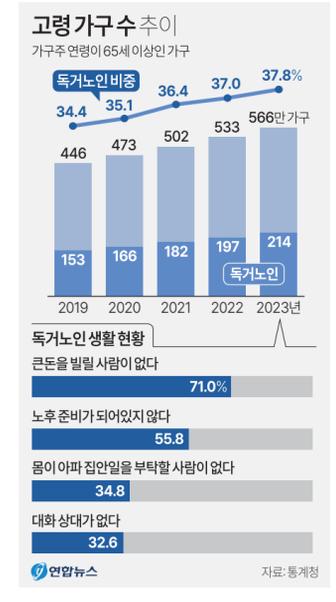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 노동자를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 안주하게 하면서 인구 대책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중차대한 사안이다. 21대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됐던 이민청 설립 법안도 22대에서 다시 수면위로 부상했다. 전남 연구원은 전남의 산업 환경과 구조를 반영해 외국인 유학생 및 숙련 근로자 유치 계획을 포함한 맞춤형 이민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안 했다.

안정적인 체류 자격을 획득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을 해야 한다. 주민과 관계 형성, 학령기 자녀 교육, 의료-금융 문제 등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덜어내야 한다. 다문화적인 환경에 더 익숙해져야 한다. 전남도와 시군 등 지자체의 능동적 역할이 요구되는 시기다.

그래픽 뉴스

혼자사는 고령자 33% "대화 나눌 상대가 없다"

혼자 사는 65세 이상 고령자 10명 중 3명 이상은 대화할 상대가 전혀 없어 고립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0%에 육박했고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통계청은 28일 이런 내용의 '2024년 고령자 통계'를 발표했다. 지난해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566만 1천 5백 가구가 이 중 213만 8천 3백 80명(37.8%)가 혼자 사는 고령자, 이른바 '독거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 사는 고령자 가구 비중은 2015년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소득이 있는 혼자 사는 고령자 중 절반이 가까운 47.8%가 자신의 소득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에 만족하는 고령자 4.2%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혼자 사는 고령자 중 32.6%는 대화 상대가 없다고 답했다. 34.8%는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없었고 71.0%는 큰돈을 빌릴 사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 도움, 자금 차입, 대화가 모두 어렵다고 답한 혼자 사는 고령자는 전체의 18.7%를 차지했다. 5명 중 1명꼴이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